

데스크 시국



채희중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22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는 이슈 단어가 완전히 바뀌었다. 선거 개표일까지도 대다수 기사의 제목을 장식했던 표심, 민심, 유권자, 심판 등의 단어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대신 권리당원,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정당 주권 등 '당원'에 방점을 둔 단어들이 연일 히팅되고 있다.

당원 권한 확대 당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당원의 권한이 강화된, 당원 중심의 정당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열성당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은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분노한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자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와 위로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정당의 주인임을 당헌·당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천명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더해졌다.

급기야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최대 세력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결의문

정당의 당원권 강화와 대권 사이의 함수

을 통해 "국회의원 중심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후 10일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안을 의결했으며, 12일 당무위원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 하지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만 이 담겼다.

민주당이 당원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그야말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급속히 변신하고 있다. 당원은 정당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당은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영향력)를 부여해야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당정치 기본 요체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우리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의 자격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관련법은 없지만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조직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을 대신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당의 모든 의사결정에 당원을 중심에 두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공격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 추구는 결국 팬덤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이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차기 대권기도를 공고히 하는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으로 인한 정치의 양극화 탓에 민주당의 '당원 중심 정당'은 여당으로부터 '이재명 사당화'라는 공격을 받는 등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권 위해선 문화 확대해야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정당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제1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획득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보수, 진보를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포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도층이다. 지난 대선의 표차가 27만 표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유권자의 20~30%에 해당하는 중도층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당원의 권한을 극대화한 당원 중심 정당이 민주당을 더욱 강한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팬덤 세력의 영향력 강화는 국민들의 반발이나 중도층의 외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원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전략이 다음 대선에서 효과를 발휘할까? 아니면 당원을 중시하는 만큼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까? 집권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만 한다.

은폐칼럼



박상하 나주대 교수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잠재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수 백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2002년 1.32명이던 것이 2020년에 0.84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며 문제는 출산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이다. 프랑스 1.8명, 미국 1.66명 등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큰 나라도 0.72명의 2배가 넘는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출생대책은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부터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5년 주기로 네 차례나 시행되었으나 매년 정책이 바뀌었다. 더구나 노동개혁과 기술창업 활성화 그리고 주거지원 확대와 같은 과업들은 엇박자의 연속이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1억원 주면 아이 낳을까요

때문이다. 올해는 출산율을 0.6명대로 예상하고 있어 목표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한 정책 실패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심각하다. 임시방편적인 백화점식 정책들을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뿌렸다. 얼마 전 경북과 경기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스스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마저도 백가쟁명이다. 원인과 대책에서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와중에 부영이 쏟아낸 1억 원 출산장려금은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최근엔 국정연구기관 보고서에서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을 제안했다가 망신을 산 적이 있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용 지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휩싸였다. 시의원은 출산장려금 대안으로 골약근 케겔과 체조운동을 내놓기도 했다. 그야말로 황당할 정책들이었다. 다급해진 윤석열정부는 저출생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처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교육·노동·복지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지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부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길 희망한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역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정책론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옹호하며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이런 신념이 현실화되려면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

한 기대를 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전제하에 출산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신실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전제조건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다시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도 막아야 한다. 반면에 시장론자들은 저출생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오히려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취업기회는 확대되고 관계지향적인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실제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나라들 모두 제로러플이 되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 0.77, 대만 0.87, 싱가포르 0.97로 나타났다. 단연코 돈을 쥐서 아이 낳게 하는 정책은 일시적인 반작용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문화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구조와 노동시간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충분히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낳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리해보면 기존 저출생정책은 이미 실패했으며 문화를 바꾼다는 것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 결국 해답은 정부가 '합리적 기대 가설'의 전제조건을 충실하게 따르는 길 뿐이다.

기고

동백꽃 피어날 때



황옥주 수필가

'동백꽃은 한사(寒士), 박꽃은 노인'이란 말은 '해동가요'에서 김수장이 처음 썼다한다. '한사'는 가난한 선비란 뜻이다. 높은 학문과 고매한 인품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세속적인 힘이 없다. 붉은 정열을 품고서도 푸른 잎 뒤에 숨고자하는, 마치 동백꽃 같은, 얼굴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다.

내 고향은 남쪽 땅, 강진골이다. 동백꽃이 군(郡)화인 고장이다. 군목도 동백나무일까 싶어 관공과에 물었다더니 '은행나무'라 했다. 동백나무가 군목이 되어선 안 될 이유라든가 있나 되묻자 담당자도 모른다.

동백꽃은 내가 무척 좋아했던 꽃이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감정은 사람이 눈뜰 때쯤일 터, 철부지인 내게 그런 연민이 있을 턱이 없다. 오로지 한 가지, 동백꽃 속에 담겨있는 꽃말을 알고부터다. 맨 처음 내게 단맛을 알려준 꽃이 동백꽃이다.

갑수록 행동은 줄어드는데 생각은 늘어간다. 늙은 탓이라. 그 중 유독 잊어지지 않은 것이 고향이다. 동

백꽃 때문이다. '지나가버린 생활을 즐기는 것은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이다'라더니 햇말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조릿대로 만든 땀대를 준비하고 동백나무를 찾아 열심히도 싸웠다. 가는 봄비가 내린 다음날은 더욱 신났다. 풍한의 달빛아래 지금도 가슴속에서는 새빨간 꽃이 어지럽게 피어난다.

꽃은 벌 나비 식량이다. 꿀만 품었다면 아무리 먼 곳의 꽃이라도 노고를 불사하고 찾아간다. 그러나 동백꽃 꿀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 꿀샘이 깊은 탓인지, 향내가 짙지 않아서인지, 꽃을 지킨다는 동백새 때문인지 아리송하다.

설화나 전설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구전설화의 정형은 선과 악의 등장이고 결말은 선한 쪽 패배로 끝난다. 동백꽃 전설 역시 슬프고, 암연하고, 스산스럽고, 삭연하다. 옛날 형제가 있었다. 형은 임금, 동생은 한 고을의 성주로 살았다. 형은 심성이 훗은 반면 동생은 마음씨가 고왔다.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는 왕은 동생의 아들이 왕좌를 탐할까 두려워 죽여 버리려 했다. 이를 눈치 챈 동생은 두 아들을 먼 곳에 숨겨두고 양자를 데리고 살았다.

결국 불안을 떨쳐내지 못한 왕은 동생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다. 곧 뒤에 진자들이 살아있음을 안 왕은 전국에 신하들을 풀어 찾아낸 조카들을 궁궐로 끌고 오게 했다. 왕을 속였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칼을 주며 직접 죽이라 겁박했다. 거절하면 가족 모두를 죽일 테세었다.

기왕지사 다 죽을 것, 동생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들들은 새가 되어 하늘로 오르고 궁궐은 벼락을 맞아 속대밭으로, 자신은 동백나무로 변해버렸다. 이를 본 새들은 아버지를 보살피 지키고자 다시 돌아왔다. 효성스런 동백새들이다.

꽃 식물은 나비나 벌, 바람의 종매로 열매를 맺는다 하여 총매화나 풍매화라 하는데 동백꽃은 조(鳥)매화라 한다. 동백새 도움으로 씨를 맺는다는 뜻이다.

고향집 우리 대밭이나 밭둑에는 크고 작은 동백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기름이 귀하던 시절, 할아버지가 심으셨을 것이다. 동구 밖 꽤 떨어진 밭두렁에도 오래된 동백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나는 어머니 얼굴도 모른다. '엄마'나 '어머니'란 단어도 책으로 익혔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날이 많았다.

아버지가 동구 밖 동백나무가 있는 밭으로 일을 나가 실 뽐날이면 날씨가 추워도 나는 소를 끌고 양장을 썼다. 동백꽃 꿀을 즐기는 날이다. 일이 늦어지면 첫일임을 알면서도 같은 꽃을 두 번 세 번 빨았다. 출항 후 먼 데 사람이 뜰어 갔다는 우리 집, 갑나무 밭과 내 태가 묻혔다는 뒤 언덕은 너른 길이 된지 오래란다. 꼭 한 차례 찾아가 보고 많이도 울었다. '산천 의구'란 말은 진정 옛 사람의 허사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들 여러 가지를 다 체험할 수 없고 내 체험이 남과 같을 수 없다. 때문에 개개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소중한다.

동백꽃 피어날 때면 더 갈질한 고향의 동백꽃, 이보다 더러운 게 또 있으랴!

社說

전남 글로벌 관광명소 3년 프로젝트 기대감

전남도가 전남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3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이 그것으로, 전남도는 17일과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국정부관광청과 스페인 등 9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은 전남의 관광·문화 이슈를 글로벌 축제 및 관광의 장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전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전남 관광 콘텐츠를 5개 테마로 브랜드화해 전남만의 로컬 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한 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구촌 관광 명소로 키워 나가기로 했다. 축제·둘레길, 남도 미식, 웰니스, 남도 K-컬처, 농·산·어촌 등 5개 테마 관광 콘텐츠 모두 전남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지구촌 사람들을 불러 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행사에선 전남 22개 시군의 독특한 맛과 멋, 흥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과 지역 관광지, 체험·숙박·맛집 정보가 제공돼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태국정부관광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흥 정남진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간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성과 중 하나다. 세계적 물 축제인 송크란과 교류를 통해 장흥 물축제를 지구촌 대표 물 축제로 성장시킬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남에서 열리는 2025 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도의 글로벌 관광 명소 3개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전남도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전남의 경쟁력인 남도 미식과 섬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해 전남 관광 자원의 인지도를 높일 생각이다. 전남은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에 비해 상업화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이란 3개년 프로젝트가 전남을 한국 관광의 중심으로 지구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기피시설 갈등 발상의 전환으로 풀어나가야

광주시가 도시 인프라인 쓰레기 소각장과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같은 이유로 장기 과제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서구 매월동과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 등 평가를 진행해 나갔지만 후보지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소각장이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된 탓에 주민들은 건강·환경권 침해해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론자들은 저출생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오히려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취업기회는 확대되고 관계지향적인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실제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한 나라들 모두 제로러플이 되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 0.77, 대만 0.87, 싱가포르 0.97로 나타났다. 단연코 돈을 쥐서 아이 낳게 하는 정책은 일시적인 반작용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문화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구조와 노동시간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충분히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낳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리해보면 기존 저출생정책은 이미 실패했으며 문화를 바꾼다는 것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 결국 해답은 정부가 '합리적 기대 가설'의 전제조건을 충실하게 따르는 길 뿐이다.

중부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국 광주지역 애견·애묘인들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다른 지역 시설을 찾아가거나 사체를 쓰레기 수거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꼭 필요한데도 기피시설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는 사업의 해결을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 같은 피상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세계 혜택 등 유익으로 지역과 주민을 배려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기피시설 건립을 위해선 주민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해당 지역 기관장 또는 행정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기피시설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설계에 반영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 시민들도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많은 시설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바뀔 사례를 믿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無等鼓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중부세) 등의 세제 개편 논의가 화두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1가구 1주택 중부세 완화론을 꺼내 들었다.

중부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시·군·구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신설됐다. 국세인 중부세 징수액 전액을 기초단체에 나누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세금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중부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022년 대비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중부세를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중부세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갔고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중

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도 5개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 1786억 원에서 올해 97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지방 재정 형편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더욱 힘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중부세 논의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권일 정치총괄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49, 경 제 부 220-0652, 사 회 부 220-0663, 전 남 본 부 220-0680. 경영 지 원 국 220-051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